

## [어제 광복절] 박 대통령, 일본 비판 자제... 사죄 요구 대신 '치유' 표현

입력 : 2013.08.16 02:59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서 일본 국민과 정치인 구분  
독도·改憲 직접 언급 안해... 日에 대화·협력 여지 남겨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진정한 협력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 갈 중요한 이웃이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 문제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일 간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는 고려시대 학자 이암(李爾)의 말을 인용해 "영혼(역사)에 상처를 주고 신체(영토)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독도 문제를 간접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 국민과 정치인을 구분하며 한·일 관계 경색의 책임이 일본 국민 전체가 아니라 우익(右翼) 성향의 정치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박 대통령이 사죄·반성이라는 표현 대신 역사 문제의 직시·치유·배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일본과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 놓는 동시에 일본 정치권에 과거사 문제를 풀고 가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3·1절 기념사와 비교할 때 전략적으로 톤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일본)와 피해자(한국)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이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호응할 경우 9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나 10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태 경제협력체회의,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양국 국민의 바람에 일본의 지도층 인사들이 부응하기를 바란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